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0면	특자도의회 권혁열 의장-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의장단-김진태 도정 특별보좌관 간담회	1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의장단-특별보좌관 간담회	1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민선8기 특별보좌관과 상생발전 간담회	2
江原日報	온라인	도의회 안건위.사문위.농수위 현지시찰	3
江原日報	02면	자치도의회 안건위·사문위·농수위 현지시찰	4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의회, 동해안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 진행	5
매일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연어스마트양식 클러...	6
江原日報	27면	강원자치도의회 농수위-여성어업인 간담회	7
중부시사신문	온라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 간...	7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여성어업인과 간담회	8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특위 현지시찰	9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현지시찰	10
경기인터넷	온라인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직무 공정...	11
문화매일	온라인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직무 공정...	12
서울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성 ...	13
중부뉴스통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성 ...	14
KBS 춘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첫 시행됐지만...곳곳 부족[1/2]	15
江原日報	06면	“분단국가서 평화 가장 중요” 정의 도당 조례명칭 변경 규...	1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정의당, "분단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도의회 ...	17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자도 지방시대위 출범 "지방시대는 강원시대"	18
江原日報	07면	“침체된 강원대 골목상권 함께 살려요”	19
G1방송	온라인	양숙희 도의원, 현대한국화협회 42주년 대작전 참가	2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정호 도의원	21
江原日報	27면	[동정] 김용복 강원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고성)	21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왼쪽) 도의원·김용복(고성) 도의회 농...	21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불업 조성 도내 시장·군수 손잡았다	22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 버스 손실보전금 520억원... 춘천 3년새 6배 꺾충	22
강원도민일보	01면	주민설명회 패싱 송전선로, 홍천·횡성 반발 고조	23
江原日報	01면	활용 못하는 땅 '월세 27억' 주고 산 양양군	24
江原日報	02면	양양군 일회성 행사 수억 책정 '예산낭비' 논란	25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시민공청회 연다	26
江原日報	07면	벼랑 끝 횡성 디피코 '골든타임 1개월'	2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통주 범위 확대는 산업화 기회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속초다운 공공청사' 공론장 지속돼야	28
江原日報	25면	[사설] 산림엑스포 자원봉사단, 성공 개최 원동력 되어야	29
江原日報	25면	[사설] 예산 낭비한 공공사업,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30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인물 20면



특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과 도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유종운)가 7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의장단-김진태 도정 특별보좌관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특별보좌관이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와 도의회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엔 권혁열 의장 등 의장단 4명과 조동준 정무 특보, 함중국 도정협력관 등 특보단 12명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인물 27면



도의회 의장단-특별보좌관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도의장, 김기흥·한창수 부의장, 심영근 운영위원장 등 도의회 의장단과 조동준 정무특보 등 11명의 특별보좌관 및 함중국 도정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특별보좌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강원자치도의회, 민선8기 특별보좌관과 상생
발전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권혁열)는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선8기 특별보좌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선8기 특별보좌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와 강원자치도 간 상생협력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권혁열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곤 운영위원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조동준 정무특보 등 11명의 특별보좌관과 함종국 도정협력관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이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였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의 장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권혁열 의장은 “도의회와 특별보좌관이 모여 간담회를 실시 한 건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져 도의회와 도가 서로 소통하며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뉴스투데이, 엔사이드 등 36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도의회 안전위.사문위.농수위 현지시찰

안전위 고성, 사문위 강릉.동해
농수위 양양, 강릉 등 찾아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가 7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고성읍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가 7일 강릉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김용복)는 7일 도청 제2청사 환동해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가 7일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시찰을 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이날 고성군청을 방문, 고성의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조기 건설 등 지역 주요현안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현내면 지역을 찾아 피해와 지원 상황을 살폈고 남한 땅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717 OP지역을 방문,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를 방문해 해양관광 분야, 설악산 오색식도 관련 사업 등 신규 이관 업무를 살폈다. 또 '도재비골스카이밸리&해랑천망대'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을 찾아 개별관광객 수요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연어스마트양식단지 클러스터 배후부지 중 하나인 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향후계획을 살폈다. 또 제2청사 환동해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사업을 비롯한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2면

자치도의회 안전위·사문위·농수위 현지지찰

태풍 피해 지역 지원 방안 논의 연어 양식단지 조성 부지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가 7일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지찰을 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안전건설위원회는 이날 고성군청을 방문, 고성의 지방하천 유지보수와 동해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조기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현내면 지역을 찾아 피해와 지원 상황을 살피고 남한 땅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717 OP지역을 방문,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를 방문해 해양관광 분야, 설악산 오색산도 관련 사업 등 신규 이관 업무를 살폈다. 또 '도짜비골 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을 찾아 개별관광객 수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연어스마트양식단지 클러스터 배후부지 중 하나인 (주)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향후 계획을 살폈다. 또 제2청사 환동해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사업을 비롯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MBC 강원영동

2023년 09월 07일 (목)
강원

강원도의회, 동해안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 진행

김인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동해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벌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늘 양양의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강원도 해양수산물, 동원산업 등과
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또,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청 글로벌본부의 관광국 업무보고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늘은 고성군 현내면 수해 지역을 둘러보고,
내일은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개최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매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연어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현장확인

권영모 기자

(주)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가 들어설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 현장확인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위원들은 연어스마트양식단지 클러스터 배후부지 중 하나인 (주)동원산업 연어 양식산업단지 조성부지를 방문하여 향후계획과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322회 임시회 중 9. 7.(목) 현지 시찰하였다.

미디어타임즈, 누리일보 등 30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인물 27면

강원자치도의회 농수위-여성어업인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내 여성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도여성어업인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강원자치도 내 여성 어업인 바우처카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여성 어업인 단체 예산 확대 등 여성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고받았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저도 어업에 종사했기에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답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화 도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여성 어업인의 권익과 단체의 존속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됐다”며 “건의사항들이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강릉=류호준기자

2023년 09월 07일 (목)

강원

중부시사신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도 연합회장 외 시·군 회장 총 9명 참석 여성어업인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환동해관 회의실에서 강원도여성어업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 지원사업 외 4개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여성어업인과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청 환동해관서 열려
바우처카드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7일 도내 여성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릉=류호준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내 여성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환동해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도여성어업인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여성 어업인 바우처카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여성 어업인 단체 예산 확대 등 여성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저도 어업에 종사했기에 여러분들이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답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안들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영화 도여성어업인연합회장은 "여성 어업인의 권익과 단체의 존속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됐다"며 "건의사항들이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시사일보, 뉴스투나잇 등 28개 언론사 보도

일간투데이

2023년 09월 08일 (금)

지역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안전건설특위 현지시찰

고성군청·현내면 수해지역·접경지역 안보현장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국힘(춘천))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고성군 일원에서 의정활동 현지시찰을 실시한다.

7일에는 먼저 고성군청을 방문해 고성의 지방하천 유지보수, 동해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기건설 등 지역 주요현안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피해로 187세대 323명의 이재민과 약 10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

생했다.

고성군청에서의 간담회를 마친 후 수해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현내면 지역을 방문했다.

현내면은 고성군에서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어서 남한 땅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717 OP 지역을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8일에는 고성소방서를 방문해 구급 및 화재진화 활동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3년 09월 07일 (목)

전국

시사일보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현지시찰

전영선 기자



▲ 강원도의회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고성군 일원에서 의정활동 현지시찰을 실시한다.

7일에는 먼저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고성의 지방하천 유지보수, 동해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기 건설 등 지역 주요현안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피해로 187세대 323명의 이재민과 약 10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고성군청에서의 간담회를 마친 후 수해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도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현내면 지역을 방문했다. 현내면은 고성군에서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어서 남한 땅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717 OP지역을 방문하여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8일에는 고성소방서를 방문하여 구급 및 화재 진화 활동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대형 산불과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취약지역으로 소방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특히 9월 22일 시작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단 한건의 사고없이 무사히 치르기 위해 소방안전대책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방문하여 그간 행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이번 엑스포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행사장내 주요 시설물과 교통, 화재 예방 등과 관련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은 “재난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없도록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더욱 고민해보고 관계기관과 소통하겠다.”며, “이번 방문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을 잘 정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안전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일보, 미디어이슈 등 27개 언론사 보도

경기인터넷신문

2023년 09월 07일 (목)

강원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
사 직무 공정성 강화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이은미 기자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사 직무 공정성 강화

[경기인터넷신문=이은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번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고문번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번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엄기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문화매일

2023년 09월 07일 (목)
정치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
사 직무 공정성 강화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이등원 기자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사 직무 공정성 강화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문번호사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 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고문번호사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및 해촉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고문번호사 결격사유 등과 고문번호사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엄기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 및 공정성에 대한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골든타임즈, 정도일보 등 26개 언론사 보도

서울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전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성 강화

최종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서울일보/최종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목)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해당 조례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김희철 의원은 공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최종일 기자 silbo1@daum.net

중부뉴스통신

2023년 09월 07일 (목)
지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공정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해당 조례에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김희철 의원은 공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신아일보, 뉴스채인지 등 27개 언론사 보도

KBS 춘천

2023년 09월 07일 (목)
강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첫 시행됐지만...곳곳 부족



[앵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의 절반을 둘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지방의회에서는 정작 '정책지원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 감사 등 주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 수의 절반 규모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 지방의회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24명.

'정책지원관' 12명을 뒀다 하지만, 4명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역의회로 인력이 몰려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는 채용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철훈/원주시의회 사무국장 : "한 번에 광역하고 기초를 같이 뽑아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높은 광역단위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군 단위는 (채용 어려움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실제로 강원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정책지원관 정원을 채운 곳은 속초와 평창 두 군데 뿐입니다.

태백과 횡성은 정책지원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회도 정원에 1~2명, 많은 곳은 8명이 부족하지만, 추가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관 부족과 잦은 이직으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한다는 당초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원주시의원 : "정책지원관 제도는 기초의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팀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던가 전문성의 부족이 의회에 원주민들에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임용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희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책 지원관은) 일반 임기제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 공무원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정책 지원관을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하초희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6면

“분단국가서 평화 가장 중요”

정의 도당 조례명칭 변경 규탄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으로 노동인권은 ‘근로 권리보호’(본보 7일자 3면 보도)로 바꾼 것에 정의당 도당이 7일 논평을 내고 교육위를 규탄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분단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며 “도의회는 학생들에게서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년 09월 07일 (목)

정치

강원도민일보

정의당, "분단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도의회 규탄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학생 교육 조례에서 '평화' 문구를 삭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분단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노동인권'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7일 '평화·노동인권 삭제한 강원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평화'와 '노동인권'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서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교육청 근로 권리 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회의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말 속에 근로자와 사주와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며 조례 제명 변경의 사유를 밝혔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평화'를 뺀 건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조례 개정에 공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이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황학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특자도 지방시대위 출범 “지방시대는 강원시대”

위원장에 황학수 전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 및 제1회 정기회의'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황학수(사진) 전 국회의원이 맡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인사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지정을 비롯



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인구 감소지역의 종합계획, 지역 기반 산업 발전 전략 등 강원도의 지방분권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미래 산업글로벌도시 조성’ 도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황학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는 우리 국민생활의 여러 편익을 제공하는 소중한 터전”이라며 “지방시대는 강원시대”라고 정의하고 싶다.

도민과 함께 전국에서 1등가는 지방시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강릉출신으로 민선1기 강원도지사비서실장과 제15대 국회의원, 명륜학원재단 이사장,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치안문제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본지 경민현 부사장을 비롯,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경제 07면



◇강대 백령마루 문화행사 in 강대후문상권 행사가 7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후문골목에서 열려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신세희기자

“침체된 강원대 골목상권 함께 살려요”

강대 후문상권 행사 개최

“침체된 골목상권 살려요.”

강대 백령마루 문화행사 in 강대 후문상권 행사가 7일 오후 강원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일대에서 열렸다.

2023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강원대 총학생회 주관의 ‘백령마루 문화행사’와 연계해 강원대후문골목형상점가(회장:김팔성)가 주관했다. 행

사장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희철 도의원, 김영배·유홍규 춘천시 의원과 대학생, 주민, 상점가 이용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대후문골목형상점가는 올 초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와 춘천시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받아 마케팅사업, 환경개선, 상권 지원 등에 활용해 강대 후문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

사는 상인회와 학생회가 기획 단계부터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 점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강원대 후문 골목이 대학 문화를 느끼고 상권이 살아 있는 즐겁고 활기찬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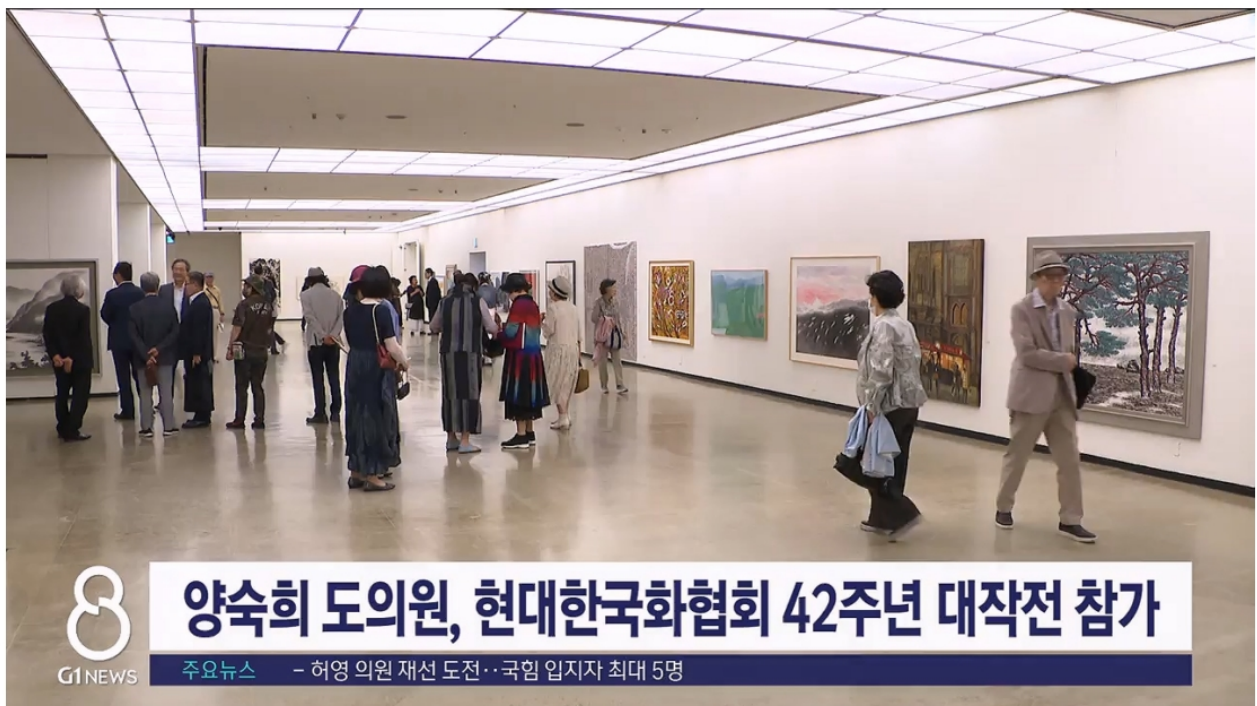
육동한 춘천시장은 “교육도시 춘천에서 대학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통해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대학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G1방송

2023년 09월 07일 (목)
강원

양숙희 도의원, 현대한국화협회 42주년 대작전 참가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춘천 출신 화가인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현대한국화협회 42주년 대작전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양 도의원은 이번 전시회에 '젊은날의 기억'이란 작품을 출품해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예술문화상과 강원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정호
도의원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30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3분기 이사회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8일 오후 2시 도 글로벌본부 환동해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분과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인물동정 17면

관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분과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인물동정 27면

◇김용복강원자치도의회농



림수산위원장
(고성)은 8일 오
전 10시30분 고
성군농업기술센
터 농기계교육

관에서 열리는 한국생활개선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3분기
이사회에 참석.



강정호(속초·왼쪽)도
의원·김용복(고성)도
의회 농림수산위원
장은 8일 오후 2시 도
글로벌본부 환동해

강원도민일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불업 조성 도내 시장·군수 손잡았다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4면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지자체 물수마약보관사무 개정 등
5개 안건 논의 공동 대응 모색
엑스포 성공개최 소통·협력 다짐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들이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김진하 양양군수·이하 협의회)
는 7일 태백호텔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와 불업 조성, 홍보에 적극 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인류의 미
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한 산림
엑스포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태백호텔에서 김진하 회장과 이상호 시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이병선 속초 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고재창 태백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지 31일 간 고성군 토성면 강원도세계
잰버리수련장을 비롯한 속초, 인제, 양
양 일원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이날 △

지방자치단체 물수마약보관사무 개정
논의(춘천) △지역개발사업 관련 산지
관리법 개정 건의(영월) △노후지방상

수도현대화사업 추진 현실화(영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 울타리
철거 건의(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리지역 재설정 건의(인제) 등 5
개 안건을 논의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
회와 관련 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로 했다. 또 강릉커피축제, 태백산 천
제, 설악문화제, 강원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 홍천사과 축제, 김삿갓문화
제, 고성통일명대축제, 양양송이&연
어축제, 원주 단상카니발, 동해무릉
제, 정선아리랑제,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등 9월부터 11월까지 열
리는 시·군별 축제를 홍보했다.

김진하 협의회장은 "강원세계산림
엑스포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
후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 성공
개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시·군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현
안을 해결하고 공동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강원도민일보

강원 버스 손실보전금 520억원... 춘천 3년새 6배 꺾충

<2022년 기준>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3면

대다수 지자체 재정지원금 의존
코로나 이후 이용 급감 회복 더뎠
지자체 완전공영제 등 타개 노력

강원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업체
에 지원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다. 춘천시는 2019년 20억원대에 그치
던 지원액이 지난해 127억원으로 급증
하는 등 시군별로도 심각한 상황인 것
으로 조사됐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와 도내 지
자체가 시내·농어촌버스 업체에 지급
하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지난
2022년 520억 8600만원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됐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이다.
도내 대다수 버스업체는 사실상 지
자체의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내버스·농어촌
버스의 수익 노선은 한 곳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며 "각 버스업체가 재정지원
금으로 유지되고 있고 업체별 손실액의

2022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합계 ▶ 52,086,010,990

춘천	12,752,455,000	영월	1,378,006,000
원주	6,219,107,000	평창	1,456,000,000
강릉	5,600,814,000	정선	1,232,000,000
동해	2,226,000,000	철원	1,779,000,000
태백	2,162,000,000	화천	453,230,000
속초	2,654,000,000	양구	903,406,000
삼척	3,053,000,000	인제	2,102,459,520
홍천	4,947,517,000	고성	647,597,470
횡성	1,615,000,000	양양	904,419,000

89~100%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
고 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버스업
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은 2019년
303억 4605만원에서 △2020년 387억
4172만원 △2021년 449억 4268만원
△2022년 520억 8601만원으로 지속
늘고 있다. 춘천시는 2019년 연간 지원
액이 21억 825만원에 그쳤으나 2022
년 127억 5245만원으로 6배 증가했
다. 원주시도 23억 4998만원에서 62억
191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이용객
회복은 더디다. 상반기(1~6월)를 기

준으로 할 경우 코로나 19 첫 해인 2019
년 2403만명에서 2020년 1876만명으
로 21%(527만명) 감소했다. 올해 1~6
월 누적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 이전의
81% 수준인 195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이용객
은 2019년 5802만명에서 △2020년
3657만명 △2021년 3446만명 △2022
년 3837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자체는 이와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타개책에 나섰다.

정선군은 노선 및 운행 감축으로 인
해 지역주민의 이동권 제한 문제가 대
두되자 지난 2020년 7월, 버스완전공
영제를 도입했다. 대중교통을 주민 복
지 문제로 인식하고, 예산을 조금더 부
담하더라도 교통서비스 질을 개선하겠
다는 조치였다.

정선군의 버스 이용객은 2020년 49
만 1315명에서 2022년 78만 270명으
로 58.8%(28만 895명)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도입해 노선 면이나 운영권을 가지면,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는 선
뜻 공영제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김택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1면

주민설명회 패싱 송전선로, 홍천·횡성 반발 고조

평창~가평 서부구간 67% 합의

횡성 공사중지 가져분 검토

홍천 12일 군청 앞 반대집회

한전 "설명회 시도했으나 불발"

속보=500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본지 9월5일자 1면 등)해 홍천·횡성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개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횡성의 경우 공사중지 가져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한전과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한전은 강원지역을 지나는 500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오는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 강원, 경기로 이어지는 230km 구간 중 동부구간은 140km 구간에 280기의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이며 94%는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나 평창~가평으로 이어지는 서부구간(90km, 160기)은 67%만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중 홍천구간은 42.8%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그동안 홍천·횡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 양측이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한전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생략, 이 같은 상황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5년 6월까지 송전선로 구축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고조되고 있다.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2일 홍천군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신영재 홍천군수와 홍천군이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해 한전에 대응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홍천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시에는 2020년 진행했던 군청 앞 노숙농성을 재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권성진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위원(전 사무국장)은 "홍천지역 설명회가 무산됐음에도 아랑곳 않고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는 한전을 규탄한다"고 했다.

횡성지역의 반발도 거세다. 이현희

횡성군송전탑백지화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없이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중지 가져분 신청, 행정소송 등 관련한 모든 법적조치, 행동을 통해 송전탑 설치를 반대 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횡성군역시 지난 4일 500kV HDV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지역 주민의 개선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촉구문을 한 국전력공사에 발송했다. 횡성군은 촉구

구문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실현 가능한 조정과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최근 한전으로부터 받은 공식답변은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현철·오세현·유승현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1면

활용 못하는 땅 ‘혈세 27억’ 주고 산 양양군

지경관광단지 내 보전지역 매입 의혹

양양군이 10년째 지지부진한 대기업의 관광단지 내 국공유지를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이 매입한 국공유지는 현 상황에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기업의 개발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은 올 6월 대기업 (주)

LF스퀘어씨사이드가 추진 중인 지경관광단지 내 철도부지 1만3,745㎡를 군비 27억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LF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양양군이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 해도 현재 활용은 불가능하다.

사업자인 LF 측에 재매각할 경우 양양군은 그나마 토지매입비를 회수할 수 있으나 군은 재매각을 하지 않

‘LF’ 추진 10년째 지지부진 상황 개발 불가 철도부지 사들여 논란 군의회 “양양군 큰 손해” 꼬집어 세금 투입해 사업자 편의 봐준 셈 군 “향후 가치 고려한 결정” 주장

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전지역인 해당 부지의 개발이 불가능해 가치가 떨어져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편이 비용적인 측면

에서 훨씬 유리하다.

결국 양양군은 대기업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토지를 자체 예산으로 대신 사들여 사업 편의를 봐준 셈이다.

이 같은 논란은 양양군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군의원은 “토지(철도부지)를 매입해 놓고 LF에 무상 공짜로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양양군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요?”라고 질의한 데 이어 “LF 관광단지 안에 포함돼 있는 땅인데 양양군이 갖고 있으면 LF에 매입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10년 넘게 진척도 거의 없다. 양양군과 강원도, LF는 2012년 11월 관광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다. 지경관광단지 사업 종료 시점은 2025년으로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주민들은 “양양군이 바닷가 금싸라기 땅을 대기업에 팔아넘긴데 이어 바로 붙어있는 땅까지 혈세로 매입한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향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투입해 매입했다”고 말했다. 최기영·김준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종합 02면

양양군 일회성 행사 수익 책정 ‘예산낭비’ 논란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감축하기로 해 유례없는 ‘예산한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이 일회성 행사에 수익여원의 예산을 편성,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양군은 다음 달 말께 있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원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양군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군의회에서 “과하다”며 낭비라는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7일 열린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봉균 의원은 “양양지역 고등학생 600여명에게 1년간 매월 7만원씩 지원해도 5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이 열악한 양양군이 일회성 행사에 5억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석 의원도 “재정을 세밀하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양양군이 편성한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예산의 16% 수준인 8,000만여원으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예산 5억원 편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예산 8,000만원 6배 넘어
군의회 “과하다” 질책 군 “2억 예비비 성격” 해명

로 치렀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단, 강원도민회,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시·군 번영회 등 각계각층의 강원도민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착공식 예산 5억원 중 2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요 인사 참석 시의 경호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 예산분석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올 7월 국세 수입 감소로 올해 강원자치도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지난해보다 1,307억원, 양양군은 19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규호·이명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지역 09면

춘천 캠프페이지 개발 시민공청회 연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 선정
연말까지 개최 사업내용 확정
시민단체·정당 반발 해결 과제
시 “시민공원 활용, 난개발 없어”

속보=춘천 캠프페이지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본지 9월 5일자 2면 등)된 가운데 춘천시가 연말까지 시민공청회를 개최,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캠프페이지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

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52만㎡를 도시숲과 문화,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춘천시가 수립한 안에는 복합용지와 주거용지, 공공용지가 구분돼 있다. 이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지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신청이 내년 상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춘천시는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관련 기관 등을 방문, 사업성 확보에 나섰다. 더욱이 춘천시가 내세운 산업이 K-Culture인 만큼 문화사업 분야의 콘텐츠 발굴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말까지 시민공청회를 열

어 시가 구상한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정당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춘천시민연대는 다음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최은예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캠프페이지는 10여년 간 술한 지역사회 안팎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공원으로 만들기로 합의됐다”며 “민선8기 춘천시가 어떤 기준으로 캠프페이지에 주거용지·복합용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고 문화재발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민섭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춘천시의원)도 7일 성명을 통해 “춘천시는 28.9%에 달하는 복합용지에 혁신산업 등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흔히 잘나가는 아이템들만 줄줄이 나열, 구체성은 없다”며 “주거단지가 포함된 계획을 백지화, 시민공원을 중심에 둔 시민공론화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를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부지 중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하겠다는 개념이 지난 개발하거나 아파트만 잔뜩 짓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경제 07면

벼랑 끝 황성 디피코 ‘골든타임 1개월’

법원 15일 본사·공장 현장 검증 심문… 한 달 이내 회생절차 결정

속보=자금난에 시달려 온 강원형 상생 일자리 기업체 (주)디피코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회사는 8월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본보 7일자 1면 보도),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변제,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 금전 차용, 임직원 채용 등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도 못한다.

법원은 오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한 달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디피코는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에 M&A를 통해 회생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8년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디피코는 2020년 황성 우천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신축, 자체 브랜드인 ‘포르토P250’을 2020년 10월부터 시판했다. 또 회사는 2021년부터 경형 전기화물차 포르토 P350 개발에 착수해 2022년 국토교통부 인증, 2023년 환경부 인증을 완료, 사전 예약 판매 중이다.

디피코는 코로나19로 해외 사업장에 및 전기 화물차 생산 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유동성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2022년도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 거래 정지와 투자 유치 실패로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디피코에 관심이 있는 인수 희망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M&A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황성=유학렬기자 hyyoo@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전통주 범위 확대는 산업화 기회

-중소벤처분야규제 개선, 선의의 경쟁 필요

정부가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 하면서, 주류 시장의 향배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강원지역 전통주 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전통주 범위 확대는, 도내 향토 업계에 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전국 시장에서 자본력을 갖춘 외지 업체와의 경쟁 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품 의 질을 끌어올리고 마케팅을 강화 한다면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규제 완화는 정부가 최근 중 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 규제 과제를 확정하면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자금·인력 등 소 상공인의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나 요건을 부과한 '골목 규제'입니 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인접지 외 원 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 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넓혀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전통주 중 지역 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 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 원료를 사 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 니다. 규제가 개선되면 소상공인의 창

의성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입니다.

지역 전통주 시장은 나날이 확대하 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주 주류별·지 역별 출고 현황'을 분석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출고 금액은 343억9200만 원으로 2021년 21억3000만원과 비 교해 30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지역 특산주 제조면허 종류 별·지역별 현황'에서도 강원지역의 경우 지난해 160개로 2021년 127개 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심화는 불가 피합니다. 오히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대표 상품으로 성장하 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MZ세대에 게 큰 인기를 끌며 업계 강자가 된 '원 소주'처럼 강원지역에 또 다른 인기 브 랜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전 통주의 질적 향상과 마케팅 능력입니 다. 전문성을 강화해 제품 차별화를 이 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장의 정도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류 업계 경영 체질 개선도 서둘 러야 합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지 역 발전을 이끄는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8일 (금)

사설/칼럼 19면

‘속초다운 공공청사’ 공론장 지속돼야

-신청사토론회 시민 열기 세부의제로 지혜 더 모으길

‘속초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토론회’가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어제(9월 7일)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열렸습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발표와 지정토론, 방청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토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를 직접 공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사의 기초를 놓기 위해 시민 서로 간에 의견을 확인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원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청사의 의제를 계기로 지방자치시대 ‘공공청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안목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입니다.

토론회는 이석권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발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어떤 점 고려해야 하나’라는 주제에 부합한 심층 토론으로 펼쳐졌습니다. 속초시의회, 속초시이통장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속초지회에 소속된 시민 3명이 지정토론자로서 속초 생활과 경험에서 우러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공공건축분야 전문가로 정부 산하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엄운진센터장과 조광희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장이 초청돼 전문적인 식견을 보였습니다. 속초시에서 수행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임명했던 중앙집중식 관치시대엔 청사 입지를 소수 고위공무원이 주도해 하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은 시민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체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각기 의견과 주장은 다르고 치열했지만, 속초가 속초다운 도시 특성을 가져야 하고 대다수 시민 삶이 풍요로운 방향이어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지자체 청사는 그 지역 인상을 대표하고 문화성을 드러내는 공공청사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공공청사는 폐쇄적이고 단순한 기능과 형태였으나, 지금은 지역 소통에도움을 주는 주민 참여 공간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지역주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다수 공공이익에 부합하려면 지혜를 모으는 공론장이 활발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에 머물지 않고 국내외 성공사례, 주민서비스 제공, 개발방식과 재정충당, 건축공간디자인 등 세분된 의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산림엑스포 자원봉사단, 성공 개최 원동력 되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대회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원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다짐’ 선서를 통해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도 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강원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세계산림엑스포는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고성군 토성면 세계잼버리수련장과 속초, 인제, 양양 일대에서 열린다. 이 기간 자원봉사자 하루 운영 인력은 154명이다. 이번 엑스포의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모두 515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안내 및 통역, 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강원자치도는 전체 면적 중 81%가 산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허리를 맡고 있고 남한의 백두대간 면적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 DMZ 일원 산림의 82%가 강원자치도에 있다. 또 산림청이 지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21개가 강원도에 있다. 인제의 자작나무숲, 홍천의 잣나무숲, 동해안의 소나무숲 등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명품 숲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산림엑스포를 강원자치도가 한국의 ‘산림수도’라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풍부한 산림은 산업화 시대에는 저개발과 저성장의 족쇄가 됐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성장동력이다. 탄소 중립 실현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산림엑스포는 강원산림의 미래를 제시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뽕뽕 뽕뽕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긍지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는 이들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세계산림엑스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다. 강원자치도의 산림자원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자원봉사자들이 엑스포가 열리는 동안 손님들을 맞아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성공 개최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자원봉사자는 지역 사회의 힘이다. 이번 행사의 자원봉사단 에너지가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8일 (금)

사설/칼럼 25면

예산 낭비한 공공사업,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면 정작 더 중요한 사업이나 민생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사업성이 없어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그 피해자는 결국 주민이 된다.

‘일단시켜’ 등 전임 강원도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지원 사업들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7억원을 들여 개발한 ‘일단시켜’는 다음 달 15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기준 총 12만3,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153만여명)의 8%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51억원을 들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우리도’ 역시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나야나)는 도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민원 통합서비스 플랫폼이다. 국·도비, 민간투자비 등 개발에만 5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1년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명이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황성의 완성형 전기차 업체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임금 체불, 이자 연체 건이 누적되며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5월 황성으로 본사를 이전한 디피코는 강원도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더해 당시 정부가 ‘황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았기에 안타

깝다. 여기에 320억원이 투입됐다.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방 재정에 책임 원리부터 작동시켜야 한다. 사전에 엄밀히 수익성을 따지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자치단체장은 국비 따내기에 골몰하고 지방의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일도양단식으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해서도 안 되지만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임 도정 때 320억 투입된 ‘전기차’ 회생 신청
사전에 엄밀히 수익성 따지는 기준 세워야
지방의회, 예산 감시 기능 강화해 나갈 때

민선 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산 낭비의 1차적 책임은 전시·과시용 사업에 골몰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사업 타

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비교 분석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공범(共犯)이다. 피해자인 주민들도 자치단체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제 주민들도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예산 감시 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뤄내는 지름길이자, 일류 주민이 되는 길이다. 예산의 효율 없이는 자치단체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은 그 쓰임새에 따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산 내역 공개는 지역 살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자극하면서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시킨다. 당연히 예산 집행의 오·남용 사례 확인은 물론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